

“급전 빌려드립니다”… SNS 활용한 불법 대출 기승

오픈채팅방서 금융취약계층 유인
법정한다 초과 이자·중개비 요구
청소년 신체 노출사진 전송 유도
단속 사각지대…“등록업체 확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대출이 성행하면서 청소년,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해당 대출들은 고물가·고금리 시대 속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까지 타겟으로 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 불법대출은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X(구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X 또는 카카오톡 등의 SNS 검색창에 ‘급전’을 검색하자 수많은 대출 관련 채팅방이 나온다.

특히 ‘미성년자 환영’, ‘무직자 환영’, ‘급전 가능’ 등의 문구로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SNS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 대출업자들은 대출 시 법정 한도를 훌쩍 넘는 턱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또 서류비, 수수료 등 소액부터 거액의 중개비를 요구한 후 잠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요구는 위법이지만, 대부분의 채팅방에서는 선(先) 수수료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편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주며 담보 명목으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 협박을 일삼은 2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올해 2월 SNS에서 알게 된 중·고등학생 2명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꼬드쳐 직접 신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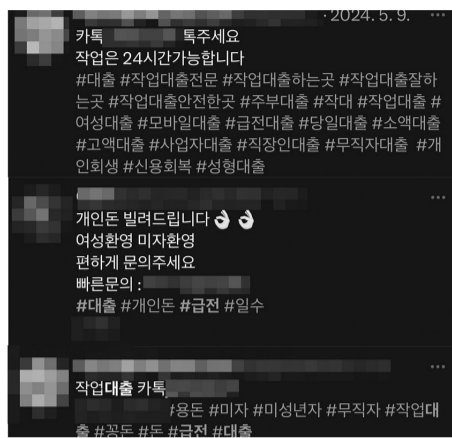


불법 대출을 홍보하는 SNS 캡처 화면.

부를 찍어 보내도록 유도, 받은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며 신체 일부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SNS를 활용한 불법 대출이 금융 취약계층을 노리고 있는 만큼 그 피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X와 카카오톡 오픈



개인도 빌려드립니다... 여성환영 미지환영 편하게 문의주세요

채팅은 금감원과 경찰의 단속망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다. 가해자들의 신원 특정이 어려운 데다가 SNS 환경을 활용해 채팅방을 폐쇄시키거나 대포폰을 쓰고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의 경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환경이다”며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기능적으로 수사 방법을 공유해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이용 시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경찰은 불법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출의 경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가해자들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여성, 청소년 등 금융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피해 사례를 파악하는 데도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고 연중 단속과 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북구, ‘위생불량’ 식육식당 19건 적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잔반 재사용’ 업소 영업정지

광주 북구가 관내 유명 식육식당에서 손님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식육식당 전수점검에 나선 결과 위생 불량 19건을 적발했다.

15일 북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북구 관내 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417개소에 대해 음식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건장잔단 미실시 10건 △폐기물 뚜껑 미폐기 4건 △위생모 미착용 2건 △보관방법 미이행 1건 △냉장고 청결 불량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등 1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했던

문화동의 한 식육식당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처분과 더불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적발된 음식점의 위반사항에 따라 시설개수 명령을 내리거나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구는 나머지 일반음식점 4558개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전수 위생 점검을 추진한다.

앞서 용두동의 한 유명 식육식당 음식물 재사용 실태가 폭로돼 북구가 긴급점검에 나선 결과 잔반 재사용, 유통기한만료 식자재 보관, 냉장장고 위생 상태 불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북구는 과태료 50만원 부과와 함께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 송치를 진행 중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식당 위생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식품안전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줄 있는 삼계탕 음식점
초복인 15일 광주시내의 한 삼계탕 전문점 앞에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김양배 기자

서구 ‘온마을이음학교 서구 이음센터’ 출범

시교육청·서구·시민단체 협업
방과후학교·교육공동체 운영
서구만의 특색교육과정 개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과 광주 서구가 지역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온마을이음학교 서구 이음센터’를 운영한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15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온마을이음학교 서구 이음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정은화 서구 문화경제국장, 임성화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화 서구 마을교육공동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음센터 소개,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온마을이음학교는 돌봄, 방과후학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시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 단체가 협업해 운영하는 지역협의체다. 이번 출범식 서구 이음센터는 시교육청과 서구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의 구심점으로서 다양한 교육 주체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민-관-학 교육거버넌스 구축 △학생이 배운 것을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서구만의 특색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 3개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센터를 통해 △나도쌤 프로젝트 △찾아가는 마을쌤 △마을교육력 지원 등 거버넌스 구축 및 선순환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서구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4일 금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늘봄과 함께하는 서구 윈더풀’을 운영한다.

서구는 △서구 학부모교실 △서구에듀 페스타 △서구 윈더풀 △교육콘서트 △서구 교육경비사업 등 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은 “온마을이음학교 서구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발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광주 외제차 딜러사 대표이사, 직원 강제추행 의혹

노조, 경찰에 처벌 촉구 고소장
사측 “외부기관 사실관계 파악”

광주지역 유명 외제차 판매·정비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대표이사의 강제추행과 상급 직원들의 폭행·세금포탈 등을 주장하며 징계 등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회회는 15일 오전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 A씨는 지난 1월4일 광주 동구 소재 호프집에서 열린 회식에서 영업부 직원 4명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지난 5월24일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 대표이사 강제추행 신고 및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법무법인 조사 의뢰를 제외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B팀장은 20대 팀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안주와 술을 얼굴에 뿌리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다. 온라인 단체방 내에서의 욕설이 일상적이고 구두 수선 등 개인적 심부름도 수시로 시켰다”며 “B팀장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4700만원의 소득신고를 떠넘겨 수익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실적 1위를 한 차장급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회회가 15일 오전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의 강제추행과 상급 직원들의 폭행·세금포탈 등을 주장하며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직원 C씨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사회 초년생 직원 3명에게 수천만원의 소득신고를 떠넘겨 세금을 탈루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영업부 직원들은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고용됐다. 그러나 조 기준근과 연장근로 등 회사의 근태 관리에 따라 강제로 일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해고되는 처지다. 그동안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색하거나 신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 피해 당사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광주 서부경찰에 A씨 등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세

금 포탈 의혹과 연루된 직원들을 국제청에 신고했다.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대표이사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한 진행을 위해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를 맡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폭행과 세금포탈 의혹은 사측과 무관하다. 판매 위촉 개인사업자들 간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안다”며 “사측은 판매실적과 프로모션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정상아기자